

‘코로나19’ 확진자 1주일만에 20명대로

신규 확진 25명...증가세 주춤 해외유입 16명·지역발생 9명 전남 해외입국 37번째 확진자

2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로 감소했다.

지난 주말 100명대까지 치솟았으나, 신규 확진자 급증 원인이었던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박과 귀국 이라크 근로자 집단 감염의 여파가 주춤한 데다 지역 감염도 줄어들면서다.

광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전남에서는 해외 입국자 1명(전남 37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명 늘어 누적 1만4175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일(26명) 이후 1주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20일 이후 나흘 동안 45명→63명→59명→41명 등 40~6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주말인 25일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113명까지 치솟았고 휴일인 26일에는 58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25명의 감염경로는 해외유



27일 오전 광주 남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모처럼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는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 오후 7시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 0명을 유지하고 있다.

입이 16명으로, 지역발생 9명보다 많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5~26일 이틀간 86명, 46명까지 급증했다가 다시 10명대로 내려왔다. 전남에서도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모로코에서 입국한 40대 여성이다. 지난 2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그는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순천역 도착 후 곧바로 광양시 임시검사시설로 이동, 지난 26일 11시께 검사를 받았다.

27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고 순천의료원에 이송돼 격리 치료 중이다. 함께 입국한 남편은 음성 판정을 받고 광양시 임시검사시설에 격리 중이다. 접촉자인 KTX 동승자 5명 중 3명은 음성이며, 2명은 검사 중이다. 현재까지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37명이며, 이 중 20명이 해외 입국자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0일(4명) 이후 1주일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 6명, 경기 2명 등 수도권이 8명이다. 이

외에 부산에서 1명이 확진됐다. 한편 방대본은 지난달 19일 확진돼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5세 여성이 전남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날 0시까지만 2905명이다.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9명 증가해 971명이며, 이 가운데 위중·중증환자는 14명이다. 코로나19 검사자는 총 152만6974명으로, 149만42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만877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임대차 3법 ‘윤곽’...임대료 상승폭 기본 5%내 지자체가 결정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제’ 법 시행 이전 기존 계약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 가능

당정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 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묻는 열린민주당 김진에 의원의 질문에 이와 같은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말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 2+2안보다 강화된 2+2+2안을 제시했으나, 임대차 3법의 초기 정착을 위해 과거부터 심도 있게 논의된

기준 2+2안을 선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계약 갱신 시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를 올릴 때 5% 내에서 정하게 하면서 시·군·자치구가 조례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표준임대료 수준

을 정해서 고시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임대료 인상폭을 5% 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대해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세입자가 바로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단기간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감안됐다.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을 연장했는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총 4년의 계약기간만 인정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자 중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는 이미 2+2 이상 계약을 한 것이기에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정리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해 기존 계약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기존 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정은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일단 임대차 3법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이와 같은 부차용이 관측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집주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시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한다

일상 방역수칙부터 의료 역량 확충까지 분야·시기별 대책 마련

광주시가 피하기 어려운 ‘위드(with) 코로나’ 흐름에 맞춰 시기·분야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27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분야별로 단기, 중기, 장기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무증상, 약한 증상을 보이는 초기 감염이 많고 정확하게 분석되거나 연구 조사가 완결되지 않아 사례(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증호흡기증후군)와는 차원이 다른 유행 형태인 것으로 방역 당국은 인식했다. 광주시는 단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에 의존하면서도 휴가 등 일상과 경제 활동도 양립시켜야 하는 만큼 상황별 위생 수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예방 백신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접종한다. 중기적으로는 70대 이상 등 고위험층, 의료기관, 다중이용 시설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역학조사의 미비도 보완하기로 했다. 대구와 같은 대규모 감염에 대비한 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건 장기적 과제다. 광주시는 조선대학교병원에 추진 중인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000억원을 투입하는 감염병 전담 시립의료원 설립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과 세계적인 확산 추이를 봐도 코로나19를 조기 종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별 대책을 세워가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처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법 11월 시행

시행 규칙 입법예고

오는 11월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입법 예고한다. 지난해 통과된 군소음보상법의 11월 2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 기준과 기간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을 위해 진행되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보상이 지급된 우선순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이행 보장 차원에서, 거주지나 공공시설 등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존의 제한 요건도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코로나19 극복 노사정 합의안 오늘 의결

민주노총 제의 서명 본격 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28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돼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간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28일) 경사노위 분위원회가 열린다”며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 5개 주체가 참여해(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는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

발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노사정 합의안을 내놨으나,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진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5개 주체가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하고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합의안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정 합의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경사노위의 최종 의결 기구인 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구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동일 지면 내에서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구분

공사명	분묘 소재지	분묘가수	분묘번호(위차)	비고
별교-주암 3-1공구	총계	19		
	소계	8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77-8	1	No.33(STA.1+6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77-8	1	No.34(STA.1+6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77-8	1	No.34-2(STA.1+680)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214-7	1	No.115-1(STA.4+080)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214-7	1	No.115-2(STA.4+080)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214-7	1	No.201(STA.4+080)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214-7	1	No.202(STA.4+080)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산214-7	1	No.203(STA.4+080)	
별교-주암 3-2공구	총계	11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7-3	1	No.5(STA.6+19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7-3	1	No.8(STA.6+195)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28-6	1	No.5-2(STA.6+195)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24-9	1	No.10-2(STA.7+00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24-9	1	No.10-3(STA.7+00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726-8	1	No.16(STA.7+6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산120-9	1	No.32(STA.9+81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산119-2	1	No.31(STA.9+80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산119-2	1	No.33(STA.9+86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산119-2	1	No.34(STA.9+86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산116	1	No.37(STA.9+960)		

2. 개장사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별교-주암 3-1공구 도로확장공사」 등 2개 공사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남골당

4. 개장 후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2020. 07. 27. ~ 2020. 10. 31.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개정방법: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 공고기간 중 연구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연구자가 개장

7. 신고 처
- 별교-주암3-1공구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소(010-8642-2341) 우리 청 보상과(063-850-9165)
- 별교-주암3-2공구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소(061-811-2277) 우리 청 보상과(063-850-9172)

2020. 07. 27.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판 결 공 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제2021호 계엄법위반

• 피고인 : 이옥순

위 피고인은 계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년 7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 재 향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장흥수(541024-XXXXXX)
• 최후주소 :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11

피상속인 망 장흥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지방법원 2020년 단880호로 신청하여 2020년 7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과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7월 28일

• 상속인 : 1. 장동일(780823-XXXXXX) 광주 광산구 평동로1119번길 25, 101동 701호 (송정동 마이네이션아파트)
2. 장동민(821227-XXXXXX) 광주 광산구 평동로1100번길 7, 208동 403호 (도산동 송정우방아파트)
3. 장동민(821227-XXXXXX) 광주 광산구 평동로1100번길 7, 208동 403호 (도산동 송정우방아파트)

• 신고기간 : 2020. 7. 28. ~ 2020. 10. 6.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1. 장동일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상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행구독 220-0550